

농막 관련 농업인 인식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23년 6월 16일(금) ~ 6월 22일(목)
조사대상 : 연구원 현지통신원(총 1,116명 응답)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농막 관리 규정 개정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5월 12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3년 6월 19일 입법예고가 취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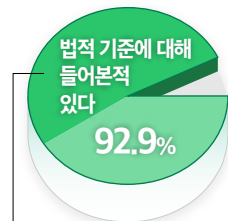


농막 인지도

농막 인지도



농막 법적 기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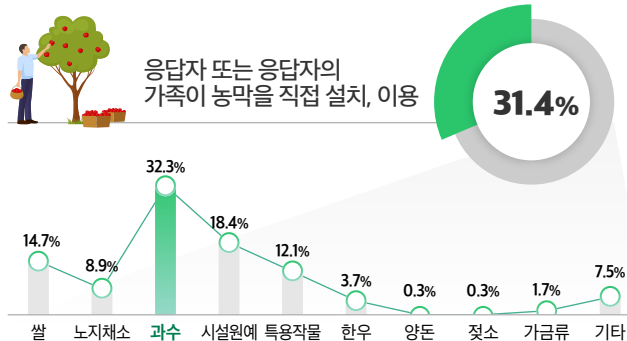
내용도 알고 있다 51.8%



고령층은 농막의 법적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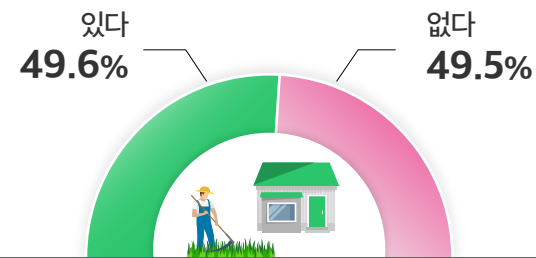
농막 이용 정도



과수(32.3%) 및 시설원예(18.4%) 농가가 농막을 많이 이용했음.



비농업인의 농막 설치, 이용 사례 여부



■ 응답자가 사는 지역(마을)에서 비농업인이 농막을 설치,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6%, 없다고 응답한 비율 49.5%와 비슷했음.



비농업인의 농막 설치, 이용에 대한 인식

비농업인의 농막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47.2%)와 중립적 입장(34.9%)이 다수였음.

BAD

부정적 태도를 갖는 중요한 이유는 비농업인이 농막을 설치하면 환경 문제, 갈등 유발, 주변 피해 등 직접적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기 때문

농촌 경관을 해치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	46.1%
거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반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적다	36.2%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다	30.1%
하수 방류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28.2%
악취 발생, 쓰레기 투기, 화재 위험 증가 등 주변에 피해를 준다	27.8%
호화 시설 등 때문에 박탈감이 생긴다	19.6%
소음이 심하다	5.1%
기타	4.8%

나쁘다 47.2% 느낌없다 34.9% 좋다 17.5%

모름/무응답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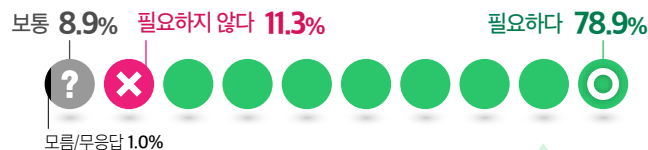
52.1%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
40.0%	비농업인이지만 농사를 성실히 짓는다
40.0%	지역 주민과 잘 지내는 등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26.8%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18.9%	농지 가격 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8%	기타

비농업인이 농막을 설치, 이용하더라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례가 있고,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마을 활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GOOD



불법 농막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 여부



불법 농막 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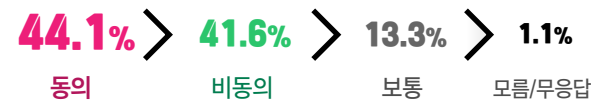


데크 등 부속시설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켜 농막의 크기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조치	30.6%
신규 설치 농막의 내부 휴식공간 제한 (기존에 설치한 농막 제외)	25.6%
전입신고 제한, 농작업과 관련 없는 야간 취침 제한 등 주거 기준 명시	18.2%
건축물로 설치해서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로 설치 명시	16.2%
전기·수도·가스 등 농막 내·외부 시설 설치시 관련법 준수 명시	7.4%
모름/무응답	2.0%

- 비농업인이 개별적으로 농막을 설치, 이용하는 사례와 달리, **별장형이나 전원주택 형태**의 농막을 짓거나 **대규모로 농막을 설치, 분양**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78.9%)**하는 비율이 높았음.
- 불법 농막 방지 대책으로 **면적 제한 강화 및 가설건축물 명시 등 설치 기준 강화**가 이용 기준 강화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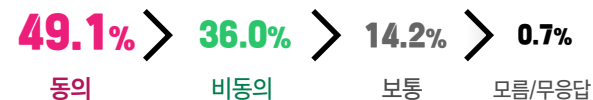
주말 체험용 농막의 야간 취침 허용 관련 찬반 의견



■ 동의 비율(44.1%)이 비동의 비율(41.6%)보다 높았음. 이는 단속(斷續)적인 취침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농업인 야간 취침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임.



주말 체험용 농막의 합법화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비율(49.1%)이 비동의 비율(36.0%)보다 높았음. 이는 불법 농막 설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른바 **지역소멸로 대변되는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식한 결과임.



농막과 관련한 자유 의견

- ‘농막’과 관련한 자유 의견은 총 397건이 제시되었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1건(48.1%),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6건(26.7%), 그 외 건의 사항이 100건(25.2%)이었음.

규제 강화 및 완화 이유

규제 강화

- 자연경관 훼손, 생활오염 심각, 마을주민과의 갈등 요소, 화재 문제 심각
- 농막 근처 농지 작물을 관리하지 않아 인근 농가까지 피해 발생
- 전입신고까지 하여 농촌주민에게 간접피해 유발
- 비농업인의 불법 농막 설치로 전입농민까지 규제강화 대상에 포함
- 농업인의 심리적 위화감, 박탈감 발생(호화주택 등)
- 청소년 탈선, 범죄인 은닉 장소, 도박장 등으로 악용 가능성

규제 완화

- 인구 유입, 농촌지역에 활력소, 이농현상 완화
- 귀농·귀촌을 위한 새로운 방안
-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치유/힐링 공간으로 활용
- 농업인의 노동 투입 시간 절약



제도 개편 의견

규제 강화

- 세컨하우스, 거주, 휴양시설 용도 농막 근접 필요
- 관련 수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도입
- 지자체별 규제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점검 필요
-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
- 1인당 농막 1채만 허용

규제 완화

- 농업인 대상 정보화 및 사무공간으로의 활용 허용 검토
- 시설하우스 품목 농가는 규제 완화 검토 (철야 시설 관리, 새벽 작업 등)
- 농산물 소포장실 또는 관리실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 검토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거주지와 농막간 거리문제가 심각
-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불법 농막이 발생하지 않을 것

기타

- 쓰레기 및 폐수 처리 시설, 화장실(욕실), 전기/가스/수도 등의 설치 허용 검토
- 농막 크기 상한 확대(20㎡→30㎡) 검토
- 휴경지로 변한 소규모 전답들의 활용 방안 모색
- 임업과 농업의 농막 기준의 일원화 검토
- 전업농과 비농업인의 농막을 분리하여 관리
- 영농규모별 농막 크기 조절 필요
- 농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의 고려 필요 (거주지와 거리, 농막 면적, 장마철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데크 설치, 철야작업 시 일시적 취침 장소 필요 등)



농막 관련 기타의견에 대해 텍스트분석

*분석틀은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 시각화’를 수행

1. 빈도분석(TF-IDF값 중심)

*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은 각 키워드에 대해 중요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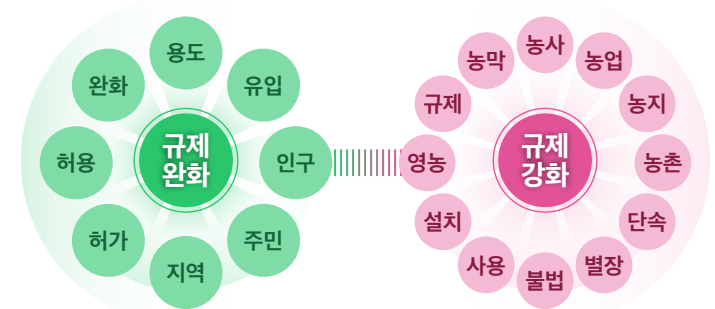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농업	14	별장
2	농촌	15	완화
3	설치	16	단속
4	규제	17	용도
5	영농	18	허가
6	지역	19	농사
7	농막	20	주민
8	허용	21	활성
9	농지	22	휴식공간
10	사용	23	목적
11	인구	24	규정
12	불법	25	제한
13	유입		

- 최근 농막 관리 강화 여부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로 **설치(3순위)**, **규제(4순위)**, **농막(7순위)**, **허용(8순위)**, **단속(16순위)**, **완화(15순위)** 등의 키워드가 언급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농막 설치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으로 **인구(11순위)**, **불법(12순위)**, **유입(13순위)**, **별장(14순위)** 등의 키워드가 나타남.

2. 담론(CONCOR) 분석

* CONCOR 분석은 반복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를 집단화하는 방법임.



- 최근 농막 관리 강화 여부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와 관련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유입’, ‘지역’, ‘주인’, ‘허가’, ‘용도’, ‘허용’, ‘완화’ 등의 단어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음.
- 이와는 반대로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에 해당되는 키워드인 ‘영농’, ‘별장’, ‘불법’, ‘설치’, ‘사용’, ‘단속’, ‘농사’, ‘농업’, ‘농지’, ‘농막’, ‘규제’ 등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며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